

# 5월 국회 열어야 하는데... 여야 공방만

##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의사 일정 합의 실패

### 한국당 “드루킹 특검”... 민주당 “방탄국회 안돼”

여야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4월 임시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30일에도 5월 국회 소집 문제를 놓고 공방만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5월 국회 소집 요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국회 불가’ 방침을 확인하면서 대립했다. 여기에 방송법과 전(前)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여야의 대치구도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내내 국회를 보이콧하더니 5월 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은 흥분중·염동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면서 “5월 국회 소집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면 이를 철회하고 다시 여야 합의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고 드루킹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술한 정치적 수사들로 포장했지만 북핵이 폐기된 것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문을 연 것도 아니다”며 “남북회담 공무실에서 민주당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정국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판문점 선언 평가에는 민주당을, 특검에는 한국당의 입장에 동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

민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준동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 뒤 “판문점 선언은 판문점 선언이고 드루킹 게이트는 드루킹 게이트”라고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경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간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와 국회 비준에 대해 온도차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높게 평가했지만 5월 임시국회와 방송법 및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

회 비준동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각 당의 입장이 현안별로 엇갈리면서 5월 임시국회의 정상적 진행도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정례회동에서 만났으나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섰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별검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여전히 일정 합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드루킹 사건의)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며 “야당 제안으로 우리가 수용했는데(한국당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남북정상회담 비준 입장만 제시하고 드루킹 특검은 일단반구 없었다는 점이 대단히 마음 아프다”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비공개회동 전 모두 발언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놓고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정세균 의장은 “남북관계발전법 21조3항을 보면 국회는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제사회의와 공정한 연대 속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북구, 사전투표 운영장비 시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0일 광주 북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 사전투표관리관 및 장비담당자 교육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투표 운영장비 시연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 문대통령 지지율 4개월만에 70%대

리얼미터, 남북 평화무드에 2.2%p ↑...민주 7주연속 50%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약 4개월 만에 70%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0.0%로 전주에 비해 2.2%포인트(p) 올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0%p 내린 24.8%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대를 기록한 것은 1월 2주차(70.6%)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리얼미터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축 메시지가 국민 대다수의 이목을 집중시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서울(70.3%·5.2%p ↑), 부산·경남·울산(66.9%·4.8%p ↑), 경기·인천(74.8%·4.1%p ↑)에서 많이 올랐다. 연령별로는 30대(76.9%·3.6%p ↑), 40대(78.2%·3.0%p ↑), 20대(77.2%·2.7%p ↑)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정당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0.9%p 내린 52.2%로 1위를 지켰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7주 연속 50%대 초반을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1.1%(0.9%p ↓)로 하락해 지난 5주 동안의 상승세가 멈췄다. 바른미래당은 6.1%(0.3%p ↑), 정의당은 5.2%(1.3%p ↑), 민주평화당은 2.7%(0.6%p ↓)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대통령 집 개방

노무현재단 한달간 추모행사...23일 9주기 추도식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노무현재단은 ‘평화가 온다’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5월 한 달 동안 서울과 김해 봉하마을 등지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를 연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우선 다음달 1일부터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무르던 봉하마을 집을 시민들에게 공식 개방한다. 재단 홈페이지(http://president-house.knowhow.or.kr)에서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신청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또 5일 어린이날에는 봉하마을 곳곳에서 퀴즈 대회, 마을 그리기 대회, 교복 체험 행사 등을 연다. 이날 하루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들을 위해 노 전 대통령 집 특별 관람도 하려된다. 11일 오후 7시에는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잔디밭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주제로 방송인 김제동씨의 특강을 마련했다.

재단은 또 다음달 3일 오후 1시30분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문재인 정부 1년과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조명관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제6회 ‘깨어있는 시민의 날’을 맞아 남산둘레길 걷기대회를 연다. 서울 남산둘레길과 남산공원 성곽길을 거쳐 안중근의사기념관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행사로,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토크쇼 등이 마련된다.

9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된다. 재단은 추도식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위해 당일 오전 7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무궁화 열차를 ‘봉하열차’로 운행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與 ‘판문점 선언’ 후속작업 착수

분야별 당정협 추진...평화당·정의당 연대 국회 비준 공조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27 남북정상회담 후속작업을 지원하기에 소매를 건어 붙이고 나섰다.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며 “판문점 선언의 불가역적,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총 13개 항으로 구성된 ‘판문점 선언’의 세부 내용을 정책위 차원

에서 분석한 뒤 곧바로 분야별 당정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미애 대표 주관 아래 외교통·국방위·교문위·국토위 등 관련 국회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개최도 검토 중이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이 함께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가칭)를 결성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에 있어 협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려면 조당적 협력이 필요하

다”며 “3당 연대안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평화 분위기 띄우기’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반도 대화·평화 무드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후보가 확정된 다수 지역에서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등식을 내세워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손질하는 중이다. 당 정책위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았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광역자치단체별 핵심 공약 점검에 나섰다.

신경제지도의 핵심은 동해권(에너지·자원), 서해안(산업·물류·교통), DMZ(환경·관광) 지역을 묶는 3대 경제벨트로, 해당 지역 출마자들의 정책 공약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연일 깎아내리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공세에도 강하게 맞대응할 방침이다.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보수도 멤버난과 조롱, 냉소 이전에 뭔가 역할을 찾아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나주, 2층 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5200만원
- H. 010-6838-1230

